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1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활성화 주역으로 우뚝 서겠다	1
강원도민일보	08면	"모든 발주처 발로 뛰어 전문건설 보호 앞장"	1
江原日報	04면	도·시·군 의원, 총선 지원군 역할 톡톡	2
강원도민일보	19면	K-culture 페스티벌 in 평창	2
강원도민일보	17면	동해 북평고 총동문회 신년인사회	3
江原日報	14면	북평고총동문회 신년인사회	3
江原日報	13면	간성축구회장 이·취임식	3
江原日報	21면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춘천)	4
강원도민일보	21면	[동정] 김용복(고성·위 왼쪽)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용광...	4
강원도민일보	21면	[동정] 강정호(속초·왼쪽)·원미희(비례) 도의원	4
강원도민일보	14면	춘천시민 51.6% "의정활동비 150만원 적절"	5
강원도민일보	21면	속초시 지속가능 관광도시 밑그림 그린다	5
江原日報	05면	산업재해 사망 2명중 1명 '60대 이상 고령층'	6
강원도민일보	07면	중대재해법 확대 "당연-당황" 온도차...부족한 수사인력 도...	6
강원도민일보	01면	화천산천어축제 154만명 기록... 강원 겨울축제 잇따라	7
강원도민일보	20면	'역시 화천산천어축제' 차별화·신속 관리 빛나	7
江原日報	16면	15년 연속 '밀리언 페스티벌' 명성 재확인	8
江原日報	15면	연 18만명 방문 '신성장동력' 영구 존치 총력	8
강원도민일보	15면	원주 창업지원허브 핵심기관 입주 무산 '뼈걱'	9
강원도민일보	19면	영월읍 한골도시숲 맨발걷기 코스 3월 착공	9
江原日報	14면	태백산 눈축제 열린 시내 곳곳 '함박눈 인파'	10
江原日報	10면	GTX-B·제2경춘국도 조기개통 해답은 '돈'	10
江原日報	13면	100억 가치 해안가 개발 '발목'	11
강원도민일보	18면	홍천터미널 주차장 노후화 이용객 불편	11
강원도민일보	23면	[사설] 안전사고 없는 일터 동참할 때	12
강원도민일보	23면	[사설] 죽서루, 활기 넘치는 역사 여행지로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생존 위협 영세 기업 지원 대책 마련해야 한다	14

강원특별자치도 경제활성화 주역으로 우뚝 서겠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정기총회
유공회원 34명 기관·단체장 표창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문건설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을 다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회장:박용석)는 지난 26일 춘천 스키이컨벤션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기호·노용호 국회의원,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최봉용 도 건설교통국장, 박옥녀 도교육청 행정국장, 정의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심보훈 강원시설단장,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부회장을 비롯한 내빈, 회원 150여명이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회장:박용석)는 지난 26일 춘천 스키이컨벤션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참석했다. 박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우리 업계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종합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는 결국 도미노처럼 전문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 위기 끝에

반드시 환하게 빛나는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전문건설인들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는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고 했듯 여러분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용호 의원은 “강원지역 총생산의 10% 규모를 전문건설인들이 이뤄주고 있다”며 “전문건설인들의 일을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식구처럼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 위상 제고를 위해 힘쓴 유공회원 34명이 기관·단체장 표창 등 포상을 받았다. 2024년 신규 백년기업으로 선정된 31개사에게는 ‘전문건설 백년기업’ 인증현판과 부상이 전달됐다.

‘전문건설 백년기업’은 도내에서 20년 이상 대표자 변경 없이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2021년 처음 만들어져 올해까지 총 168개사가 선정됐다. 김현아기자 hahaa@

강원도민일보

2024 01 29 ()

08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는 최근 춘천 스키이컨벤션웨딩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모든 발주처 발로 뛰어 전문건설 보호 앞장”

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정기총회
유공회원 포상·백년기업 시상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회장 박용석)는 최근 춘천 스키이컨벤션웨딩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기호, 노용호 국회의원을 비

롯해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양숙희 도의원, 정의경 원주국토관리청장,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최봉용 도 건설교통국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등과 함께 회원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1부와 2부를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도내 전문건설업 발

전에 헌신한 유공회원들의 포상과 함께 2023년말 기준 도내에서 20년 이상 대표자 변경 없이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원사에 대한 ‘2024년 전문건설 백년기업’ 시상이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지난해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박용석 회장은 “올해도 부동산 침체 등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협회는 올해도 모든 발주처를 발로 뛰어 전문건설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우진

▶수상자명단 kado.net

2024 01 29 ()

江原日報

04

도·시·군 의원, 총선 지원군 역할 톡톡

與 도당 당직 도의원 다수 포함
광역·기초 지역 점 조직 강점

4·10 총선 선거일이 7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18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총선 지원군 역할에 나서고 있다. 각 당의 활동에 힘을 보태는가 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 활동을 홍보하거나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고 함께 독려하기도 한다.

총선 주자들은 지역에서 세세한 점조직을 갖고 있는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표심이 지지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시장·군수의 경우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에 제약받지만 광역·기초의원들은 기본적인 선거법만 준수한다면 활동 범위가 자유롭다.

실제 국민의힘 도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난 25일 발표한 도당 주요 당

직자 인선에는 도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도당은 전국위원에 김희철·임미선 도의원,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에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여성위원장에 양숙희 도의원을 선임, 활약을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꾸린 더불어민주당 도당의 총선거확단에도 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과 기초의원 등이 대거 포함돼 기획·조직분과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달 초 열린 각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도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태는 등 지원군 역할을 해내고 있다.

다만 당내 경선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에서는 최종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광역·기초의원들이 앞장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각 정당은 이들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1 29 ()

19



K-culture 페스티벌 in 평창 강원2024대회 문화공연으로 마련된 'K-culture 페스티벌 in 평창'이 지난 27일 오후 대관령면 평창동체육관에서 김진태 지사,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군의장, 지광천 도의원과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주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29 ()

17



동해 북평고 총동문회 신년인사회 동해 북평고 총동문회(회장 최재석 도의원) 신년인사회가 지난 27일 뉴동해관광호텔에서 열렸다.

江原日報

2024 01 29 ()

14



북평고총동문회 신년인사회 북평고총동문회(회장:최재석) 신년인사회가 지난 27일 뉴동해관광호텔에서 이철규 국회의원, 이동호 동해시의장 등 동문과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 01 29 ()

13



간성축구회장 이·취임식 간성축구회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7일 고성종합체육관에서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제5대 황승열 회장이 이임하고 제6대 김명호 회장이 취임했다.

江原日報

2024 01 29 ()

21

◇정재웅도의회사회문화위원



장(춘천)은 29일
오후 2시 춘천시
보건소 별관에서
열리는 제11대
(사)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회장 취임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1 29 ()

21

회장 이·취임식에 참
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29 ()

21



김용복(고
성·위 원
쪽) 도의
회 농림수
산 위 원

장·용광열(위 오른
쪽)·함형진 고성군의
원은 29일 오전 10시
토성농협 대회의실에
서 열리는 토성농협
제63기 정기총회에 참
석한다.



강정호(속초·왼쪽)·
원미희(비례) 도의원
은 29일 오후 6시 속초
시마레몬스호텔 연회
장에서 열리는 속초여
자고등학교 총동문회

2024 01 29 ()

강원도민일보

춘천시민 51.6% “의정활동비 150만원 적절”¹⁴

500명 설문 결과 258명 응답
39.2% ‘137만~110만원’ 선택
이주 의정비심의위 최종 결정

속보=춘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본지 1월 24일자 12면) 결과 ‘의정활동비 150만원’ 지급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8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춘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2026년도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수집과 연구 및 보조활동을 위해 매월 지급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월 110만원이던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춘천시는 이달 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정한 수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춘천시민 2명 중 1명이 의정활동비 150만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설문은 심의회에서 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수준의 적정 여부와 2024년~2026년도 의정활동비 잠정 지급 기준액 수준으로 구성됐다. 설문 문항은 △150만원 △149만~144만원 △143만~138만원 △137만~110만원이다. 조사 결과 500명 중 절반이 넘는 51.6%(258명)가 150만원으로 응답했다. 137만~110만원은 39.2%(196명)였으며, 143만~138만원 7.6%(38명), 149만~144만원

1.6%(8명) 순이었다. 이번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주 중 회의를 개최, 의정활동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면 춘천시는 이 같은 결과를 춘천시의회에 통보, 춘천시의회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만큼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속초시 지속가능 관광도시 밑그림 그린다

2024 01 29 ()

21

관광종합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축제 콘텐츠 개발 등 9월 말 준공
시 “향후 10년간 청사진 수립”

속초시가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밑그림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속초시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격변한 관광 트렌드 및 미래 관광 수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지난해 연말 해당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향후



속초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10년간의 속초시 관광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관광동향 및 여건변화 분석’,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 계획’, ‘공정관

광 육성 계획’, ‘설악 관광특구 진흥 계획’, ‘관광축제 콘텐츠 개발 및 축제 실행 계획’을 골자로 속초시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관광 트렌드 전망 및 분석 보고

서에 따르면 최근 관광 동향은 유명 관광지나 최대한 많은 곳을 짧은 시간에 방문하던 과거와 달리 ‘휴식과 쉼’, ‘힐링’, ‘원포인트’, ‘나만의 명소’ 등이 강조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병선 시장은 “관광업계 종사자, 시민, 관광객, 시청 사업부서 담당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이번 용역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속초시 관광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를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江原日報

2024 01 29 ()

05

산업재해 사망 2명중 1명 '60대 이상 고령층'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강원지역 산업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의 절반은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고령층 근로자 보호 대책이 시급해졌다.

28일 본보가 춘천지법과 산하 4개 지원에서 최근 1년간 선고된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판결(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15건을 분석한 결과 7건(47%)은 사망 근로

자가 60~70대였다. 나머지 8건(53%)은 50대였다.

사망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근로자 19명 규모의 A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대표 B씨는 60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지난 18일 춘천지법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쓰레기 압축 차량이 고장 났음에도 안전 지대 설치 등을 하지 않고 쓰레기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도내 1년간 법원 판결 분석

15건 중 7건 60~70대

대부분 안전 수칙 미준수

영세업체 지원 등 대책 시급

건설 현장 추락사도 마찬가지였다. 원주의 건설업자 C씨는 60대 근로자 추락사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해 11월 원주지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외벽 마감 공사 현장에서 안전 난간과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벌목 현장도 사망 사고에 취약했다. 영서권의 D법인인 50대 일용 근로자 사망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근로자가 벌목한 나무에 머리를 맞고 숨졌는데,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사업장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로 확대 되면서, 강원지역의 적용 사업장은 1,199개에서 2만 2,013개로 대폭 확대됐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도 15만여명에서 39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의 대책 역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

강원도민일보

2024 01 29 ()

07

중대재해법 확대 “당연-당황” 온도차…부족한 수사인력 도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지 2년만이다. 노동계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지만, 강원도내 사업체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비상이다. 관련 수사인력도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시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으로부터 확대 적용된다.

시행 2년만에 5인 이상 확대 적용

6명 불과 도내 수사인력 확충 고심

2만1092곳 대상 '실효성' 우려도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다. 이에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필요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강원 노동계·경영계 반응 엇갈려

노동계는 "적용 유예 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전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용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바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은 "강

원도내 대다수 사업체가 적용을 받는 것이다 보니 일부 사업체에서는 '이제 그만둬야 하나'라는 자조적인 의견도 나온다"며 "회사가 사라지면 직원들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노동·경영계의 양측 입장이 모두 대변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 부족 해결 방안 있나

강원도의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부터 확대 적용될 경우 수사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적 체도 생길 우려도 크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수사 인력은 6명 남짓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존 적용 대상이던 50인 이상 사업장(2021년 기준)인 942개에서, 2만1092개까지 늘어나 관련 수사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원지역의 중대재해 1호 기소 사건은 2022년 2월 춘천교지원청 이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다. 이 사건 발생 10개월만에 기소 이후에도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책임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쌍용 C&E에서의 중대재해 사건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도 수사 인력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장관은 "지방 관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훈·박재혁

강원도민일보

2024 01 29 ()

01

화천산천어축제 154만명 기록... 강원 겨울축제 잇따라

밀리언 페스티벌 명성 재확인 폐막
태백산눈·대관령눈꽃축제 개막

1월의 마지막 주말 화천 산천어축제가 흥행신화를 이어가며 막을 내렸고, 태백태백산눈축제와 평창대관령눈꽃축제가 잇따라 개막했다.

지난 6일 개막 이후 23일간의 대장정 끝에 막을 내린 '2024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는 폐막일인 28일 오전까지 누적방문객 154만명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최고 겨울축제의 흥행 신화를 이어갔다. 개최할 때마다 100만명을 넘

어서며 '밀리언 페스티벌'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 화천산천어축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신음하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올해는 30여개국의 외신이 600회 이상 보도했고 외국인 방문객수도 8만명을 넘어서며 글로벌 축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산천어축제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제31회 태백산눈축제가 지난 26일 개막해 첫 주말 사흘 간 태백산국립공원과 황지연못, 문화광장 등에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 태백시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에만 15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추산했다. 주행사장인 당골광장에는 길이 40m 규모의 '전설의 땅 태백' 등 눈조각이 전시 중이며, 'NOW OR NEVER-지금, 여기, 태백'을 주제로 2월 4일까지 계속된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대관령눈꽃축제는 지난 27일 대관령면 횡계리 송천축제장에서 개막해 2월 11일까지 열리고 있다. 축제는 다양한 눈·얼음 조각감상, 눈·얼음 썰매 등 즐길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길이 100m의 청룡 눈터널과 아이스카페가 마련됐다.

신현태·안의호·김우열

강원도민일보

2024 01 29 ()

20

'역시 화천산천어축제' 차별화·신속 관리 빛나

즉각 제설 관광불편 최소화
주민·사회단체 환경정화 도움
숙박시 밤낚시 무료 흥행 전인
평일 평균 1만명 방문 위엄

28일 폐막한 2024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의 흥행비결로 '다름'과 '신속함'이 꼽히고 있다. 고정관념을 깨는 역발상과 함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군과 나라는 지난 2016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밤낚시를 도입한 뒤 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밤낚시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역발상'을 통해 산천어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정착했다.

또한 눈이 없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해외 마케팅에 나서 한국을 찾은 외국 여행객들이 겨울에 꼭 한 번 방문해보고 싶은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중심 프로그램은 얼음낚시뿐 아니



2024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28일 폐막을 끝으로 23일 간의 여정을 마쳤다.

라 눈썰매와 얼음썰매, 썰라인, 버블 슈트체험, 조경철 천문대부스, 과학교실, 몸 녹임 쉽터, 호국이 체험관, 겨울문화촌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가족단위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 나고 있다.

특히 하얼빈 빙등기술자들을 초청해 조성한 실내 얼음조각광장과 얼음이성 눈조각은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가 됐다.

또한 매주 토요일 화천읍 선동거리에서 야간 페스티벌을 개최해 축제의 열기를 밤까지 이어 갔으며 코로나

19로 중단했던 핀란드 북극마을의 리얼 산타와 요정 엘프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 어린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이번 축제 때 평일 평균 1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고, 외국인 방문객도 8만명을 기록했다. 28일 오전 기준 누적방문객 154만명을 기록했다.

화천산천어축제는 방문객들의 입장료의 30~50%를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줘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소비

를 유도해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도 한몫했다.

또한 축제장 공식 먹거리 장터와 기념품점에서는 사전 협의로 공시된 가격을 적용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없도록 했다.

축제기간 동안 많은 눈이 내렸지만 축제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제설작업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순번을 정해 지정일에 축제장 곳곳을 돌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청정한 축제장을 조성했다.

얼음판위에서 치르는 축제인 만큼 주최측은 축제 기간 내내 매일 재난구조대를 물속에 투입해 얼음의 두께와 강도를 점검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올해 산천어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주민들과 축제 관계자들이 내 일처럼 나서준 덕분"이라며 "내년에도 더 즐거운 축제, 더 안전한 축제, 더 행복한 축제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안의호 eunsol@kado.net

江原日報

2024 01 29 ()

16

15년 연속 '밀리언 페스티벌' 명성 재확인

이슈 현장 산천어축제 관광객 153만 돌파

축제 경제 효과 1,300억원... 지역 상경기도 수직 상승
외국인 관광객 10만 기록 흥행보증 민·관 협력 결과

【화천】'국가대표 겨울축제'인 2024 화천산천어축제가 관광객 153만1,000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축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28일 폐막한 산천어축제는 15년 연속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흥행 보증 수표'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구름인파 관광객 유치 콘텐츠=주민들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소멸을 막고 어떻게 해서든 지역을 살찌우려는 자원

봉사자, 기관·사회단체, 군의 회, 공무원, 소상공인,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다. 잠깐 나와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축제, 우리 축제'라는 인식과 애정 그리고 연대감이 매우 강했다. 메인 프로그램인 얼음낚시 이외에 선등거리, 세계 최대 실내얼음조각광장, 얼음썰매 등 관광객을 유혹하는 콘텐츠가 즐비했다.

■외국인 관광객 10만 유치=10만여명의 외국인 관광객



◇화천산천어축제가 15년 연속 '밀리언 페스티벌' 명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축제 마지막 주말에도 관광객들이 겨울 손맛을 즐기고 있다.

이 찾을 정도로 외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매년 말 외신을 대상으로 축제 설명회를 열고 외신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서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외신 보도를 타고 해외로 축제 소식

이 확산됐으며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올겨울 아시아에서 꼭 봐야 할 축제로 산천어축제를 가장 먼저 꼽기도 했다. 해외 관광마케팅과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 등도 주효했다.

■상경기 수직 상승=전문 기관 자료를 보면 축제 경제효

과는 1,300억원이 넘는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상경기가 수직 상승했다. 축제장 농특산물 판매센터에서는 10억원에 달하는 매출 성과를 거뒀다.

숙박하면 밤낚시 입장권과 파크골프장 입장권을 제공하는 '역발상'도 주효했다. 파크골프는 산천어축제와 더불어 화천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다.

'변해야 살아남는다'는 역발상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최문순 군수는 "겨울축제의 대명사인 산천어축제와 더불어 파크골프, 백암산케이블카 등을 연계해 세계적 관광상품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영기자 kyjang3276@

江原日報

2024 01 29 ()

15

연 18만명 방문 '신성장동력' 영구 존치 총력

이슈 현장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종료 막아라

올 연말 시한... 설문조사 앞두고 상품 개발·홍보전
"전문학적 예산 해체 반대... 케이블카 활용이 친환경"

【정선】정선군의 올해 최대 현안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영구 존치와 강원랜드 규제 완화 2가지로 크게 압축된다. 이 중 가리왕산 케이블카 영구 존치 문제는 시간적 제약에 의해 올 연말이면 한시적 운영이 종료되는 만큼 정선군과 사회단체, 주민들까지 모두 나서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효용성을 입증하고,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2018 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 개최지였던 가리왕산은 복원과 존치를 두고 정부 및 환경단체의 입장과 정선군민들의 입장이 대립해오다 2021년 6월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곤돌라를 3년간 한시 운영하고, 이후 운영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 거쳐 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리모델링과 안전성 검증 과

정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케이블카가 정식 개장되면서 1년 동안 18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성황을 이뤄냈다. 이 중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탑승객만 6만여명에 이른다.

군은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정선의 유일한 올림픽 유산인 데다, 전문학적 예산을 들여 케이블카를 전면 해체하기 보다는 친환경적 산림 복구와 일반인은 물론 교통약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시설로 케이블카를 이용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을 유지해 가리왕산 케이

블카의 효용성을 크게 높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경제성, 친환경이라는 모든 난제를 한번에 해결한다는 명분도 있다.

■산림청 연구용역 첫 문턱 넘어야

산림청은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며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전문학적 예산이 들더라도 케이블카 전면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가 케이블카 영구 존치를 결정하는 첫 문턱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오는 2월 중 정선군민 800명을 대상으로 가리왕산에 대한 태도, 케이블카 운영이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묻는다. 이후에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고 정선군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영구 존치돼야 한다"며 "케이블카와 웰니스 관광이 접목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대국민 홍보전을 통해 케이블카 존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125@

강원도민일보

2024 01 29 ()

15

원주 창업지원허브 핵심기관 입주 무산 '배격'

강원청년창업 사관학교 등
내달 준공 앞두고 입주 불투명
시 "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예정"

원주 창업지원허브가 준공을 앞두고
창업 관련 핵심기관 입주가 불투명해
지며 출발부터 '배격'이고 있다.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에 들
어서는 창업지원허브는 원주청년창

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뿐만 아니라
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
됐다. 국비와 시비 총 100억원이 투입
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월
준공 예정이다.

당초 이곳에는 강원청년창업 사관
학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지
역사업단, 시 출연재단인 미래산업진
흥원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관학교와 원주지역사업단이 최근
입주를 포기 또는 유보하면서 기능 수

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소기업진흥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관학교는 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창업지원
허브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원주지역사업단은 올 5월 임대기간
이 만료되면 춘천 ICT벤처센터로 이
전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역사회
의 강한 반발로 잠시 유보된 상태지만
1월말 현재까지 이렇다할 대안이 마
련되지 않아 창업지원허브 입주는 여

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원주미래산
업진흥원은 계획대로 입주가 진행된
다. 하지만 창업지원허브의 중추 기능
인 창업관련기관들이 속속 빠지면서
출발부터 제 기능을 하기에 역부족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2월 준공에도
당분간 운영되지 않는다"며 "창업 지
원 기능을 갖춘 미래산업진흥원이 창
업지원허브 운영을 맡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 등은 진흥원 설립 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영

강원도민일보

2024 01 29 ()

19

영월읍 한골도시숲 맨발걷기 코스 3월 착공

왕복 600m 어싱길 시범 조성
1억800만원 투입 6월 개장
발 씻는 시설·구간 추가 방침

속보=영월읍 한골도시숲에 최근 전
국적인 열풍을 끌고 있는 맨발걷기
코스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본지 2023년 10월 16일자 15면)되
고 있는 가운데 영월군이 시범코스
조성을 확정했다.

정운중 산림복지과장은 최근 열린
제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우선 시범적으로
한골도시숲에 편도 300m, 왕복
600m구간의 어싱(earthing)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국내 대표적인 어
싱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한편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이며 1억
800만원을 들여 오는 3월 착공에 들
어가 6월쯤 개장할 예정이다.

또 향후 군민과 탐방객들 반응을

살펴본 뒤 주변에 600m구간을 추가
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선주현 군의원은 "어싱
길 코스가 너무 짧다"며 "주천면 등 서
부권역에도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마
련하라"고 요청했다.

박해경 군의원도 "맨발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작하는 만큼
조성 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

정 과장은 "어싱길 조성 예정부지
가 문화재청 부지인 만큼 타 지역과

차별성 있게 만드는 한편 발 씻는 시
설도 함께 갖춰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9개 읍·면별로 조금씩 확대 개
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골도시숲에는 소나무와 전
나무숲은 물론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희귀수종인 시무나무와 세계적인 희
귀종으로 황금색 꽃이 피는 모감주나
무 등과 흑자색 꽃의 수크령 등 각종
초화류가 서식해 힐링 최적 장소로
호평받고 있다. 방기준

2024 01 29 ()

江原日報

14

태백산 눈축제 열린 시내 곳곳 ‘함박눈 인파’

대형 눈조각 전시·이글루 카페 인기폭발
눈썰미대회 등 참여자 대거 몰려 활황

【태백】제31회 태백산 눈축제가 지난 26일 개막하면서 ‘겨울왕국’ 태백시 곳곳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개막 첫날 주행사장이 태백산국립공원 당골광장에 마련된 대형 눈조각 전시, 이글루 카페, 스노볼 포토존 등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압도적인 규모의 초대형 눈조각들은 기념사진을 남기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체험장에도 발길이 몰리고 있다. 특히 소망메시지 카드 달

기, 눈미끄럼틀·얼음썰매장, 캐리와 장난감 키즈파크, 전통 겨울놀이 등은 아이와 함께 찾는 가족관광객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겨울 레포츠도 활황이다. 28일 태백산 정상 은빛눈꽃세상에서 열린 태백산 전국눈썰미대회와 27~28일 매봉산 천상의숲과 대조봉 일대에서 개최된 ‘태백 천상의숲 백패킹 페스티벌’은 참여자가 대거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다.

축제 기간 석탄박물관, 자연



◇강원자치도의 대표적인 겨울축제인 태백산 눈축제가 지난 26일 개막한 가운데 태백 당골광장에서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이번 축제는 올 2월4일까지 태백산국립공원 일원 등에서 펼쳐진다.

사박물관, 용연동굴 등은 휴관 없이 정상 운영돼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출향단체 회원들도 대

거 고향 태백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태백산 눈축제 등에 동참하고 있다.

태백산 눈축제는 올 2월4일

까지 10일간 태백산국립공원, 황지연못, 태백문화광장에서 펼쳐진다.

김광희기자 kwh635@kwnews.co.kr

2024 01 29 ()

江原日報

10

GTX-B·제2경춘국도 조기개통 해답은 ‘돈’

이슈현장 춘천~수도권 교통망 확충 과제

춘천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연장, 제2경춘국도 개통으로 또 한번의 교통 변혁을 앞두고 있다. 2009년 서울~춘천고속도로, 2010년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을 이룬 후 교통수요를 분산할 더욱 촘촘한 교통망을 갖추게 된 것이다. 다만 핵심이 되는 개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선 GTX-B 춘천 노선과 제2경춘국도 모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 GTX-B 관건은 결국

‘돈’=정부가 앞서 발표한 GTX 청사진은 노선별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 다만 GTX 전체 사업비의 56%를 민간 투자로 충당하겠다는 큰 틀만을 밝히면서 정부 재정 투입에 제한을 뒀다.

하지만 GTX-B 마석~춘천 연장 구간의 경우 서울 주변 도시들과 달리 수익성을 감안하면 민자 유치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앞선다. 춘천시 역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정부 예비타

GTX 춘천 구간 민자유치 난항 전망 국비 지원 관건
경춘국도 기재부 심사 받아야 국비 500억 확보 숙제

당성 조사 통과로 최대 70%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더욱이 추정 사업비 4,238억원 중 70%를 국비로 지원받더라도 나머지 지지체 몫을 상대적으로 연장 구간이 짧은 경기도와 어떻게 분담할지도 풀어야 한다.

또한 타 민자 사업 구간 여파에 따른 운임 책정도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다. GTX-B 노선은 용산역~상봉 구간을 제

외한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구간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과 민자 사업이 혼합된 GTX-A노선의 경우도 최근 운임 발표를 앞두고 여론이 엇갈린다.

■ 제2경춘국도 기재부 심사대 오른다=연내 착공을 기대했던 제2경춘국도는 건설비 상승 여파로 올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초 1조2,000억원으로 추산하

던 사업비가 5,000억원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 예타 면제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앞으로 적정성 검토에만 최대 9개월이 추가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될 다음달 중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신청에 들어가더라도 시공사 선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착공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또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국비 500억원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춘천=정윤호기자

100억 가치 해안가 개발 '발목'

이슈 현장 고성 군유지 환수 법정다툼

오호리 일원 5필지 시설 착공 연장... 군 일부 승소
회사 "환경 변화" 항소... 군 "치유시설 면밀 검토"

고성군이 2006년 민간사업자에게 관광위락시설 개발을 명목으로 현물 출자한 군유지를 환수하기 위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이 고성군이 2022년 4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서 "현물출자 당시 토지 평가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과정은=고성군은 2006

년 7월 해양치유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당시 40억원 상당의 군유지인 죽왕면 오호리 일원 5필지 1만8,224㎡를 해양심층수 전문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현물 출자했다. 당시 군은 2년 이내 해양심층수치유시설인 타라소테라피 사업을 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기한 내 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물출자한 부동산 출자 당시 평가액으로 군에서 환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2013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받고도 사업시기 및 자금조달의 문제 등을 이유로 2015년과 2018년 두차례에 걸쳐 착공 기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2018년 매매예약서 2차 변경 후 2년이 지나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군은 '지정된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근거로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 과정은=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환경 변화와 군과의 협의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으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민간투자 계획에 의지해 개발 가치가 높은 해안가 군유지를 출자한 것이 오히려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

적도 나온다. 군이 출자한 군유지는 당시 40억원가량의 가치였지만 지금은 2배 이상 오른 1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군은 뒤늦게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며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우려 및 사업 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타라소테라피 건립과 관련해 지역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 민간 투자와 공격 투자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성=김천열기자

강원도민일보

홍천터미널 주차장 노후화 이용객 불편

2019년 리모델링 '일부 땀질식'
부지 전면공사·안전우려 목소리
금강고속 노조 '기관 협력 필요'

홍천터미널의 노후화된 주차장 바닥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가 시급하다는 이용객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홍천읍 희망리 393 소재 홍천종합터미널은 버스가 주·정차하는 터미널 부지 내 바닥 곳곳이 파이 고, 깨진 채 방치돼 있었다.

금강고속 관계자 등은 지난 2019년 8억원(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금강고속 2억원)을 들여 건물 리모



홍천터미널의 주차장 바닥이 노후화돼 깨지고, 패여 보수공사가 시급하다.

델링 공사를 한 것을 제외하면 36년이 넘도록 노후화된 주차장 바닥 전면 아스콘 공사는 이뤄진 적이 없다

고 밝혔다. 중량이 큰 버스가 수시로 드나들다 보니 정기 보수공사가 필수지만 운영업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수시 일부 공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는 홍천터미널의 바닥 등 시설이 개선돼야 한다는 이용객과 운영업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객 A씨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나가고, 들어올 때 바닥이 패여 덜컹덜컹한다"며 "읍내에 위치한 터미널의 시설 개선 등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힘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열 금강고속 노조위원장은

"지난 30여년간 일부 땀질식으로 보수를 하긴 했지만 전면공사는 한 번도 하지 못한 만큼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터미널 주차장 바닥공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강고속 자체 재원 마련과 군의회, 군청 등에 협력을 이끌어내 안전한 지역 거점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종합버스터미널은 1987년에 개장, 금강고속이 운영하며 본사를 두고 있다. 국도 5호선과 국도 44호선 인근 도내 춘천, 원주, 횡성, 인제, 속초 등과 서울 등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등을 오가는 버스의 거점 터미널이다.

유승현 yoosh@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1 29 ()

/ 23

안전사고 없는 일터 동참할 때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조기 정착 최대 지원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적용을 미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1월 27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사업주 및 기업 경영자 측에서는 법 시행을 더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연기가 불발됐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 종전에도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서비스업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덜 긴장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등 분야에서는 민감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직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실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일터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행돼 왔으며 이번에 50인 미만 5인 이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 등은 선진국에 들어섰는데도 산업재해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 및 재하청 구조로 이뤄지는 건설업의 경우 사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원청기업은 그 책임에서 가볍게 처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산업현장에서의 인명 경시 풍조와 안전환경을 후순위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대재해법은 사

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에 더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로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산재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해롭거나 위험한 요인을 평소 살피면서 파악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사업장 안전보건환경을 갖추기 위해 인력 및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을 줄이는데 50인 미만 업체에서도 이제 동참할 때가 됐습니다. 5인 미만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산재 발생 억제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따른 산업안전 관련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적용을 앞두고 가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서는 산업안전분야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밀착 교육 및 신규 사업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비롯해 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및 시군에서도 강원고용노동지청 및 기업, 노동자 기관단체와 협력해 조기에 제도가 정착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29 ()

/ 23

죽서루, 활기 넘치는 역사 여행지로

-국보승격 계기명소 재조명, 관광 루트화 필요

한국의 대표 누정 건축물로, 자연과 어우러져 절경을 자랑하는 삼척 죽서루가 최근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963년 보물 제213호로 지정된 이후 60년 만에 승격했으며, 도내 문화재 가운데 13번째 국보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탄생한 첫 승격이자 관동팔경 가운데 유일한 국보 문화재라는 점에서 시선을 끄니다. 승격이 결정된 뒤 문화재청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는 경내에서 '삼척 죽서루 국보 승격 기념식'을 개최해 자축했습니다. 시민들도 죽서루가 명소로 재조명받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보 승격은 의미가 가볍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척 죽서루는, 관동팔경 정자의 틀을 깬 반전의 건축물입니다. 절벽 위에 있는 자연 암반을 반석으로 삼아서로 다른 길이의 13개 기둥을 세워 지어졌습니다. 규모가 커, 정자가 아닌 누각으로 분류됩니다. 바다 근처에 있는 다른 팔경 정자들과는 달리 강을 끼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본 죽서루의 풍광은 오십천의 절경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 소나무 숲, 누각 지붕이 조화를 이루어 웅장함을 자아냅니다. 몽환적인 동양화의 감흥도 불러일으킵니

다. 측면에서 보면 하늘로 비상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죽서루 가치는 경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팔경 정자들과 또 하나 다른 점은, 확장된 행정 기관의 기능을 했다는 점입니다. 삼척도호부 객사인 진주관에 속한 죽서루는 삼척 부사의 업무 공간에 위치했으며, 강원도 관찰사나 다른 관리들이 공무로 방문할 때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관동 명승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삼척을 찾은 문인이나 예술가들에게는 쉼터이자 친교 장소로 사랑받았습니다. 죽서루는 문화 창작자들의 관동지역 집결지였고, 이 때문에 조선 문화사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제는 죽서루를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명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보 승격 자체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유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는 여행지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누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한편, 의미 있는 행사나 공연의 무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명소와 연결하는 계획도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여행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활력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4 01 29 ()

/ 19

생존 위협 영세 기업 지원 대책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 강원지역의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1,199개이지만, 5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만2,013개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18배 증가하며, 식당 등 골목 상권도 영향을 받게 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중대 산재는 30건이었지만,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시되면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이는 5인 이상 동네 마트, 식당, 차킨집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난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지만 경기 불황으로 진 빚을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법으로 노동자들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취약계층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자칫 일터에서 쓰러질 수 있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의 채용이 꺼려지고 그동안 다소 관대했던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인정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책임자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유럽 의회

에서는 주요 법을 만들 때 '사전 입법평가'를 한다. 법 제정으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한다. 물론 '사후 입법평가'도 한다. 미국은 상·하원에 변호사 출신인 입법 전문가를 각각 50여명씩 두고 법의 실효성, 위헌 여부 등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집중 따진다. 우리는 명분만 좋으면 공장에서 빵 구워내듯 효과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법을 통과시킨다. 비록 좋은 의도의 법이라고 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든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실시에 따른 영세 업체들의 준비가 돼 있느냐다. 영세 사업장업주가 처벌받으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크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도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과연 산재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다. 출근한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하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江原日報

2024 01 29 ()

/ 19

GTX 건설, 선거용 안 되려면 재원 방안 밝혀야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숙원사업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춘천(B)·원주(D) 연장을 확정했다. GTX가 완료되면 춘천에서 서울 중심까지 55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으로 운행시간이 크게 단축돼 수도권 강원시대가 열리게 된다. GTX-B 노선의 경우 용산~상봉 구간을 오는 3월 먼저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춘천까지 55.7km를 연장하는 방안을 진행한다. 새로 건설하는 GTX-D·E·F, 이른바 'GTX 2기' 노선은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다. GTX-D 원주 노선은 정부가 우선 추진하는 1단계에 속해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반영 후 현 정부 임기 내 예타 통과가 추진된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점은 재원이다. 정부는 B노선의 춘천 연장과 D노선의 원주 신설과 같은 GTX 기존 노선 연장과 신설 노선 재원 마련에 대해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노선이 경기도 내 지자체와 연결돼 있는 만큼 사업비 분담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GTX의 조기 개통을 위한 민자 유치도 문제다. 기존에 발표된 GTX-B 노선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용산~상봉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D·E·F노선은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민자 철도는 사업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다. 민간이 사업비를 50% 이상 투자하고 운영비를 100% 부담한다는 것도 메리트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최장 5년 이상 사업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민자 유치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조기 완공'은 커녕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굵직한 정부·여당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구상대로 순조롭게 건설되면 이보다 반가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 조달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장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부담 우선 추진’은 재정 부담 키워

민자 유치는 자칫 ‘희망 고문’ 될 수도 있어

추진 일정 차질 없도록 비용 전략 세워져야

도내 지자체에서 막대한 건설비용 부담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민간 재원은 빠르게 유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교통 인프라 건설은 속도와 지속 가능성이 생명이다. 특히 미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칫 일정이 계획대로 되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5년 임기의 특정 정부가 단시일 내에 쉽게 끝낼 사업이 아닌데도 재원 방안도 없이 발표되니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GTX 건설 계획이 '안 되면 말고', '부작용이야 어떻든', '뒷감당은 누가 하든' 식의 선거용 시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포퓰리즘 정책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재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